

‘한덕수 대행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 위헌 확인’

헌법소원 · 가치분 제기 잇따라

“헌법 · 법률이 정한 임명 아니라면 재판청구권 침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에 대한 헌법소원과 가치분 신청이 헌법재판소에 잇따라 제기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는 이날 오전 한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지명과 관련해 헌법소원과 가치분 신청을 냈다. 김 변호사는 한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이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정한 헌법 27조 1항을 위배해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9일 제출한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의 당사자로, 해당 사건은 현재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 김 변호사는 심판청구서에 “대통령 몫 재판관 후보자 지명 및 임명은 선거를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직접 부여 받은 대통령이 갖는 국가기관 구성권”

이라며 “이는 권한대행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라고 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피청구인의 임명행위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내용과 절차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이는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직접 침해하게 된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해당 헌법소원 본안 결정이 선고될 때까지 재판관 후보자 지명 행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치분 신청도 함께 냈다. 이외에도 법무법인 덕수는 이날 자신의 형사 사건과 관련한 위헌법률심판이 진행 중인 윤호씨와 홍도씨를 대

리해 비슷한 취지의 헌법소원과 가치분을 제기했다. 한 권한대행은 전날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안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후임자 지명에 대해 “현재 결원 상태가 반복돼 현재 결정이 지연될 경우 대선 관리, 필수추경 준비, 통상현안 대응 등에 심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며 국론 분열도 다시 격화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뉴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위원회는 9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전북개발공사 김대근 사장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과 전문성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전북자치도의회, 전개공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도덕성 · 전문성 · 업무 이해도 등 집중 검증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위원회(위원장 김대중)는 9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전북개발공사 김대근 사장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과 전문성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전북개발공사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운영 조례’에 따른 인사청문 대상기관으로, 지난 3월 21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인사청문 요청서가 제출되어 오늘 전북개발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뤄졌다. 김대중 위원장은 인사청문에 앞서, 지난 10대, 11대 전북개발공사 사장이 중도에 자진 사퇴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의회는 인사청문 과정에서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과 우려를 강력하게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의 인사

강행으로 인해 이러한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개발공사 사장의 약 7개월 이상 공백으로 인한 모든 피해는 결국 개발공사와 도민에게 돌아가며, 이에 도지사는 그간의 부적절한 인사에 대해 도민과 도의회에 입장 표명과 사과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사청문위원들은 원장 후보자를 상대로 지역개발사업 추진현황 및 신재생에너지 사업 현안, 도내 건설산업 위기 등에 대한 대책, 기관장의 역할 및 조직 운영 계획 등 업무능력과 함께 도덕성을 중점적으로 질의했다. 김대중 위원장은 “도내 건설업체 폐업률이 증가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으로 도내 건설공사의 주요 역할을 하고 있는 개발공사 사장 후보자로서 위기에 대한 비전과 복안 등 전문성 및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 등을 철저

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도의회 인사청문위원회는 전북개발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전문성, 업무능력 이해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10일 결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인사청문위원회는 전북개발공사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산업건설위원회 김대중·김동우·김만기 의원이 재·서단이·이병도·임종명 의원과 의장 추천 의원 염영선·오현숙·장연국·이병철 의원 등 모두 12명으로 구성됐다. 후보자는 전주시 출신으로 전주 신흥고, 연세대 법학과, 연세대 행정대학원 정치행정리더십을 전공했으며, 지난 1992년 현대건설에 입사해, 현장, 홍보분야, 법무실장 등을 근무했다. 이후 계열사 송도랜드마크시티 및 보성산업의 대표이사를 거쳐 현재 디에이치에스(주) 부회장으로 재직 중이다. /이만호 기자

“도, 새만금신항 공식 입장 해수부에 전달해야”

군산시의회 새만금특위

군산시의회 새만금특별위원회는 9일 기자회견을 통해 “새만금신항 무역항 지정과 관련해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해양수산부에 도의 공식 입장을 전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군산시는 군산항과 2026년 개항하는 새만금신항을 통합 관리하는 원포트(One-Port)를, 김제시는 새만금신항을 신규 항만으로 지정해 군산항과 분리하는 투포트(Two-Port)를 주장하고 있다. 새만금특위는 이날 “새만금신항의 무역항 지정이 임박한 이 시점에 도지사가 그동안 준비해온 의견을 해수부에 명확하게 공식적으로 제출해야 할 중대한 시기에 와 있다”면서 “그러나 도의 최종 공식 의견은 아직 제출되지 않고 있고, 이는 지방자치단체 간 대립과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군산시의회 새만금특별위원회는 9일 “새만금신항 무역항 지정과 관련해 도지사가 해양수산부에 도의 공식 입장을 전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전북자치도는 지난해 26일 해수부 실무협의회에서 무역항 지정에 대해 도의 공식 의견이 아닌 자문위원회의 의견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는 도의 책임 있는 공식 의견 제출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광역자치단체가 국가정책

에 따라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입장을 정리하여 전달하는 것은 법적 절차이자 행정기관의 책무”라며 “도지사는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원포트 무역항 지정이라는 정당하고 현실적인 입장을 명확히 표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군산=이재훈 기자

“권한대행 월권행위, 헌정질서 파괴”

민주 도당, 한 대행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 규탄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이원택)이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두고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명백한 월권행위”라며 강하게 규탄했다.

서소영 전북특별자치도당 대변인은 9일 오전 발표한 성명에서 “헌법재판관 지명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헌법이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며 “한 총리 대행이 이안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부장판사를 지명한 것은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 대변인은 특히 한 총리가 과거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위한 소지가 있다고 밝혔던 입장을 스스로 뒤집은 점을 지적하며 “이 순간부터 한 총리는 헌정 파괴의 공범이 됐다”고 비판했다.

또한 도당은 이안규 법제처장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

로, 내란 동조 의혹까지 제기된 인물”이라며 “이런 인물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것은 국민을 기만하고, 시민들의 헌신을 짓밟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전북도당은 이번 헌법재판관 지명을 ‘내란 지속’으로 규정하고, 한 총리 대행의 공식 사과와 지명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위원장 대안 형태로 처리된 개정안에는 헌법재판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해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조항,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후임자 임명 때까지 연장한 법안 조항의 부칙에 ‘법 시행 전 퇴임하는 재판관에도 적용한다’는 내용의 소급 조항 등도 포함됐다. /이만호 기자

전북선관위, 제21대 대선

공정선거지원단 모집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전북선관위’)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21대 대통령선거의 공정선거지원단 3명과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22명을 오는 14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공정선거지원단은 ‘공직선거법’ 제60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고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은 특정 정당·후보자와 이해관계가 없고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변호사 자격 소지자 및 법학 전공자, 데이터분석 등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우대한다.

근무기간은 대통령선거일인 6월 3일까지이며, 공정선거지원단은 선거범죄 예방·단속활동 지원 및 절차사무 등 보조업무,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은 사이버선거범죄 예방·안내·단속활동 업무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선관위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전북선관위 지도과(063-230-2330)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전북선관위는 각 구시군선관위에서도 공정선거지원단을 모집하고 있으며, 선관위별로 모집인원 및 접수기간, 채용 기간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지원하고자 하는 해당 구·시·군선관위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기 바란다. /이만호 기자



권요안 도의원, 농업분야

기후변화 대응센터 건립 간담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권요안 의원(완주2)은 지난 8일 도의회에서 농업분야 기후변화 대응센터 건립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했다.

권 의원은 “여대급 폭염, 폭우, 겨울철 이상 고온, 폭설 등 기상이변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기후 의존성이 높은 농업분야 피해가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간담회 취지를 밝혔다.

이어 “농업분야의 기후변화 대응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를 위해 전남 해남에 조성 중인 농식품부 기후변화대응센터와 같은 상시기구를 전북자치도에도 설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최재용 국장은 “전북자치도는 작년부터 농업 관련 부서장이 참여하는 ‘농업농촌 기후변화대응 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생산적응, 탄소중립, 재해대응 등 분야별로 내용을 공유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2022년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기후변화대응센터는 2026년 전남 해남군에 594억 원 규모로 조성되며, 국내외 기후변화정책 연구개발 지원, 데이터 플랫폼 운영, 미래 기후변화 첨단 인프라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만호 기자

이재명, 대선 출마 공식화... 현장연설 대선 영상 공개

오늘 대선 출마 선언... 11일 미래비전 · 경선캠프 인선 발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직을 사퇴한 이재명 전 대표가 오는 10일 차기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다.

9일 이 전 대표 측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10일 오전 10시 현장 연설 없이 영상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미래 비전과 경선캠프 인선을 다음날 발표할 예정이다.

출마선언 영상에는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는 이 전 대표의 의지와

각오가 담겼다. 해당 영상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서울 모처 카페에서 촬영했다고 한다.

비전 선포식은 11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갖는다. 민의의 정당 국회를 존중하고 정당 간 협치, 언론과의 소통을 중시하는 상징적 장소를 택했다는 게 이 전 대표 측 설명이다.

경선캠프 인선에는 제21대 대선에서 함께 발표한다. /뉴스

민주, 오늘까지 대선 경선 규칙 결정

“당원주권 강화 중요”... 완전국민경선 일축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선거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경선 규칙을 오는 10일까지 결정하기로 했다.

민주당 이준석 특별당규준비위원장은 9일 “오늘과 내일, 모레까지 사흘 내로 규칙이 결정돼야 정상선거를 치를 수 있다”며 “위원들과 잘 논의해 대선특별당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과정마다 민주적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해야만 국민들께 동의받을 수 있다”며 “당원주권 강화 방안을 어떻게 도입할지가 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당원주권 강화를 언급한 만큼 사실 상 비법(비이재명)계가 요구하는 100% 국민 투표로 뽑는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은 수용할 수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당규준비위는 이날 첫 회에서 10일 2차 회의를 추가로 열어 공천 규칙을 확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위원장은 비공개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결정된 게 없다. 내일은 결론을 낼 것”이라며 “절차적으로 내일까지는 결론을 내줘야 금융일

최고위를 거쳐 의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토요일과 일요일 전당원 투표로 최종 확정하고 다음 주 월요일 후보 등록을 받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사실상 국민경선도 (완전국민경선이 아닌) 국민참여경선”이라고 말했다.

이어 “별도의 권리당원 섹터(부문)를 둘 것이냐 말 것이냐란 문제 거리가 되는 것”이라며 “국민경선이나 국민참여경선이나 구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당헌에 따르면 대통령 후보자 선출은 ‘국민참여경선’ 또는 ‘국민경선’을 원칙으로 한다. 국민참여경선은 ‘권리당원 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로 후보를 선출하는 방식이다. 국민경선은 대의원·권리당원은 선거인단에 자동으로 포함하고 참여 의사를 밝힌 비당원 국민에도 투표권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뉴스

복합재난 안전관리 제도적 기반 마련

이명연 도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도의회 본회의 통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명연 의원(전주10)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복합재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명연 의원은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와 도시환경 복잡화로 인해 자연재해와 사회적 재난이 연쇄적 또는 동시에 발생하는 복합재난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복합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 및 도시 기능을 효과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추

진됐다. 총 7개 조항으로 구성된 조례안은 복합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으로는 △복합재난 안전관리계획 수립, △복합재난 대응 지침 작성·관리, △복합재난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운영 등이다. /이만호 기자